

비상경제장관회의

22-1

(공개)

에너지 위기 대응과 저소비 구조로 전환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

2022. 9. 30.

관 계 부 처 합 동

순 서

I. 국내외 현황	1
II. 추진 대책	3
1. 전 국민 에너지 절약문화 정착	4
2. 효율혁신 투자 강화	7
3. 에너지 요금의 가격기능 단계적 정상화	8
4. 공급 비용 최소화 및 취약계층 지원	9
III. 향후 계획	10

I. 국내외 현황

- 현재 전세계적으로 70년대 오일쇼크에 준하는 에너지 위기에 직면
 -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및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등으로 천연가스·유연탄 등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
 - * 에너지가격 폭등('21.1Q→'22.8월) : LNG 5.5배(10→55\$/MMBtu), 유연탄 4.7배(89→419\$/톤)
 - 최근의 에너지 위기는 에너지 분야를 넘어 물가·무역수지·환율 등 경제 전반의 위기로 전이·확산 →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 심화
 -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가 중심으로 고물가 및 무역적자가 지속되고, 경기침체 우려와 함께 외환시장 변동성도 확대
 - * 무역적자(억불, '22.1~7월 기준) : (일본) 749 (한국) 156 (이태리) 151 (프랑스) 1,134
- 국내적으로도 높은 에너지 가격에 따른 경제 전반의 어려움 가중
 - 에너지 중심으로 높은 수입물가 상승세와 에너지 수입액 급증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, 환율에도 부담요인으로 작용
 - * 수입물가 상승률(전년동기비, %) : ('22.1/4) 32.4 (2/4) 35.2 (7) 25.6 (8) 22.9
 - * '22.1~8월 무역적자 247.3억불 / 원유·가스·석탄 수입금액 1,251.6억불
 -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연료비 리스크에 취약해진 반면, 요금인상은 억제되면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상황이 급속히 악화
- 위기의 심각성에 비해 국민의 위기의식은 미약한 상황
 -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가운데,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*가 여전하고 에너지 효율성이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
 - * 에너지원단위(toe/천\$) : ('17) 0.181 → ('18) 0.176 → ('19) 0.171, OECD 국가중 31위
↳ < GDP 1,000불 생산당 소비되는 에너지량, 에너지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 >
 - 산업과 가정 등 모든 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증가 추세
 - * '22.上 산업용(+3.1%), 주택용(+7.6%), 일반용(+1.5%) 모두 전년대비 전력소비 증가

◇ 동절기 에너지 수요 확대, 러시아 가스공급 축소 가능성 등으로 전세계적 에너지發 복합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

⇒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전 국민적 노력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『에너지 저소비-고효율』 경제 구조로의 체질개선 노력 병행 필요

참고1

한전 적자 원인 분석

- 한전의 적자는 ❶탈원전 정책, ❷국제연료가격 급등, ❸전기요금 조정 지연 등 대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

❶ 탈원전 정책은 전원믹스를 원전, 석탄 등 低원가 발전원 중심에서 LNG 등 高원가 발전원 중심으로 전환시켰으며, 이에 전력공급 비용이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연료가격 리스크가 더 커지면서 적자를 가속화

* LNG의 비중이 낮았을 때 보다 LNG 가격 증가폭 대비 전체 비용 증가폭이 더욱 확대

- 원전 이용률 저하, 원전 조기 폐쇄, 건설 지연으로 원전 발전량 비중이 '16년 30%에서 '21년 27.4%로 2.6%p 감소('17~'21년 평균 26.5%)
- 노후석탄 조기 폐지,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석탄발전 감축으로 석탄 발전량 비중도 '16년 39.6%에서 '21년 34.3%로 5.3%p 감소
- 감소된 저원가의 발전량은 고가의 LNG 발전으로 대체되고, 동시에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서,
 - － LNG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각각 '16년 22.4%에서 '21년 29.2%로 6.8%p, '16년 4.8%에서 '21년 7.5%로 2.7%p 증가

❷ 이러한 악화된 원가구조하에서 러-우 전쟁 여파로 작년 1분기 대비 LNG와 유연탄 등 발전연료 가격이 전세계적으로 4배 이상 폭등함에 따라 전력공급 비용이 급등하고, 적자가 대폭 확대

* '21.1Q 대비 '22.9월 : (LNG) 4.3배(10→43\$/MMBtu), (유연탄) 4.9배(89→439\$/톤)

❸ 아울러, 비용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 전기요금 조정이 지연된 것도 한전의 적자를 더욱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

* '21년 연료비연동제 도입 이후 총 6번의 조정기회 중 4번 동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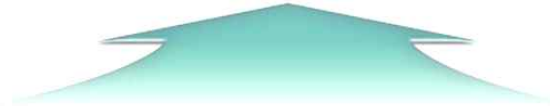
Ⅱ. 추진 대책

목표

위기에 흔들림 없는 튼튼한 에너지 안보 확립

추진 방향

에너지 저소비-고효율 산업·경제구조로 대전환



전 국민
에너지 절약문화 정착

- ① 공공부문의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
- ② 민간 부문의 자발적 절약 확산
- ③ 국민 참여형 홍보·교육 강화

효율혁신 투자 강화

- ① 민간 에너지절약 인센티브 확대
- ② 효율혁신 기반 확충
- ③ 산업 효율구조 개선 기술 확보

요금의 가격기능 정상화

- ① [전기요금] 연료비 증가분 일부 반영
- ② [가스요금] 수급관리 필요수준 조정

공급비용 최소화를 통한 안정적 공급기반 확보
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

◆ **올겨울 에너지 사용량 10% 절감**을 목표로 대대적 절약운동 전개,
근본적으로 에너지 소비 관련 **국민 의식 변화**를 통한 **절약문화 정착**

1 공공부문의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선도

① 겨울철 에너지 절감 5대 실천강령 시행('22.10~'23.3)

- ❶ 건물 난방온도 제한($18^{\circ}\text{C} \rightarrow 17^{\circ}\text{C}$, $\Delta 1^{\circ}\text{C} \rightarrow$ 난방 에너지 6% 절약)
- ❷ 겨울철 전력피크 시간대(9:00~10:00, 16:00~17:00) 난방기 순차운휴
- ❸ 온풍기, 전기히터 등 개인 난방기 사용금지
- ❹ 기념탑, 분수대, 교량 등 공공기관에 설치된 경관조명 소등
- ❺ 업무시간 1/3 이상, 비업무시간 전력피크 시간대 1/2 이상 실내조명 소등

- (시행) 공공기관(1,019개 기관)별 '에너지 10% 절감 이행계획서' 제출 및 「에너지 다이어트 10」 실천 결의식 개최

* 「'22년 동절기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」 및 시행(10월중)

- (평가) 매월 이행점검 및 대외공개,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중 에너지 절약 비중 확대 검토 및 '동절기 에너지 절약' 항목 추가*

* (기준) 에너지절약추진위 구성·운영 → (변경) 동절기 에너지절약 이행실적

② 에너지 공기업의 효율향상 지원을 겨울철에 집중('22.10~'23.3)

- (한전) 공공기관 건축물 고효율기기 교체, 중소기업 LED·인버터·변압기 기기 대체, 마트 식품냉장고 문닫기 등 지원(절감목표 214GWh)
- (가스공사) 산업·건물용 고효율 가스보일러 교체, 스마트가스미터(AMI) 보급, 취약계층 열효율 개선사업 등(절감목표 15,224Gcal)
- (난방공사) 노후·고장설비 교체, 노후 공동주택 효율개선 등(19,530Gcal)

* '23년 「에너지이용합리화법」 개정,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사업 의무화 추진

② 민간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에너지 절약 노력 확산

① 범국민 '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즈' 발대식

- 소비자·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즈* 구성·운영
 - * 에너지시민연대, 소비자단체협의회, 여성단체협의회, 새마을운동중앙회 등을 중심으로 서포터즈 모집·구성
-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즈를 중심으로 정부·지자체·경제단체·산업계·에너지공기업 등이 참여, 범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 전개
 - * (주요내용) 자발적 에너지 절약 동참, 추가적인 절약 방안 발굴·이행 등
- 온라인 플랫폼 릴레이 절약 서명식, SNS·앱 활용 절약 인증샷 이벤트 등 대국민 참여행사 병행

② (산업) 에너지다소비기업 자발적 효율혁신 협약(KEEP 30) 체결

- * 30대 에너지다소비기업이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량의 63% 사용
- ❶기업별 중장기 효율향상 목표(연도별 에너지 원단위 개선 목표) 및 ❷동절기 자발적 에너지 절감 계획에 대한 산업부-기업간 이행협약 체결
 - * 협력업체 에너지절감 실적도 포함하여 업계 전체의 에너지 효율 혁신 유도
- 목표 이행실적 평가(3등급) 및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* 제공
 - * 효율향상 관련 기술개발·사업화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우대, 유공자 포상 가점부여 등

③ (가정) 전기 '에너지캐쉬백' 전국 확대 및 도시가스 부문 신설

- (전기) 모집기간 연장(8.31→11월말)으로 참여대상 확대
 - * 現 가입자(2,340단지, 38,449세대) 기준 '22.11~'23.2월간 전력 18.5GWh 절감효과
- (가스) 도시가스 부문 에너지캐쉬백 신설(산업용 10월, 가정용 12월 시행)
 - * LNG 67,000톤(산업 53,000톤, 가정 14,000톤) 절감효과 기대

④ (건물) '에너지 다소비건물 효율혁신 프로젝트'를 전국 대도시로 확대

- 지자체 협업으로 쇼핑몰 등 대형건물 에너지 소비실태 점검 및 효율개선 방안 도출
 - * 서울시와 MOU 체결('22.7월) 후, YTN 본사·연세대학교 대상 시범사업 추진중
- 부산(11월), 주요 광역시('23년)와 '에너지 효율혁신 협력 MOU' 체결 추진

③ 국민 참여형, 생활 밀착형 홍보·교육 강화

① 국민이 주도하는 뉴미디어(유튜브·블로그·SNS) 홍보 전개

- 에너지효율 아이템 발굴, 절약챌린지 등 능동적 절약 홍보문화 확산
 - * 구독자 10만명 이상 인플루언서 대상 에너지절약방송 콘테스트(포상),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연계한 방한용품 착용 '溫(온)맵시 챌린지' 개최
- 연령대별 파워 인플루언서 활용, 각 세대를 타겟팅한 맞춤형 홍보

② 이웃과 함께하는 생활 밀착형 에너지 절약 홍보 추진

- 아파트관리비 명세서, 전기·가스요금 청구서 등 고지서를 활용하여 전국 2,400만 세대에 절약 메시지 전파
 - * 예) 전년도 사용량과 비교하여 디자인(색)이 차별화된 고지서를 발송
- 가정·상점 방문 가전기사가 전하는 '겨울철 전기절약 팁' 확산
- 정례 반상회 활용(행안부 협조) 및 지자체·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에너지 절약 동참 배너광고 게재

③ TV·라디오·신문 등 기존매체 활용 대폭 확대

- 교양, 생활정보 프로그램 및 특집기획 등을 통한 절약메시지 확산
 - * 유럽 등 해외의 에너지 위기 상황 및 대응 노력을 현장감 있게 전달
- 전국민 릴레이 기고*, 기획기사 등 집중 게재로 파급효과 제고
 - * 에너지효율유공자 현장 기고, 에너지공기업 신입직원 등 활용한 MZ세대 타겟팅 기고

④ 에너지 절약 교육 강화로 미래세대 절약문화 확산(교육부 협조)

- 전국 초·중·고 대상 에너지절약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·보급
 - * 에너지의 이해, 우리집 에너지절약 방법, 제로에너지 학교 만들기 참여 방법 등
- 에너지 절약-봉사시간* 연계 프로그램 발굴 확대(행안부 협조)
 - * 예) '전기절약 333'(3개월, 3가지 실천, 3% 전기절약) 참여시 4시간 부여

⑤ 다양한 현장체험을 통한 에너지 절약의식 제고

- 「2022 에너지 대전(’22.11.2)」 계기 생활 속 에너지체험, 교육 등 각종 현장참여 행사*를 개최하여 에너지 절약의식 제고
 - * 전기차·수소트럭 탑승 체험, IoT 연계를 통한 가전제품 에너지 제어 시연 등

◆ **민간의 에너지 효율혁신 투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, 효율혁신을 위한 기반 확충, 효율향상 핵심기술 개발**

① **민간 에너지 절약 노력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**(기재부 협조)

① **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추가 세제 지원**

- 기업(법인, 개인사업자 포함)이 '23.1.1.~'23.12.31.까지 취득한 에너지 절약시설* 투자 자산에 대해 가속상각** 적용(조특법 개정 추진)

* 산업·건물 부문 에너지절약 설비, 전력수요관리 설비 등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

** (중소·중견기업) 기준내용연수의 $\pm 75\%$ (대기업) 기준내용연수의 $\pm 50\%$ 이내

② **효율향상 핵심기술*을 신성장·원천기술 및 사업화시설에 추가 검토**('23~)

* 산업용 고효율 유체기계, 고효율 전동기 소재·설계·공정기술, 보존전압강하기술 등

② **에너지 효율혁신을 위한 기반 확충**

① **에너지 진단 실효성 제고 및 사각지대 해소 추진**

- 에너지 진단 개선안에 대한 이행의무를 부여하고,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에너지 진단 제도의 실효성 제고

* '23년 「에너지이용합리화법」 개정 추진

- 에너지 의무진단 대상*이 아닌 중소 사업장(年 500~2,000toe)을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비용 보조 검토

* 年 2천toe 이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장('21년 3,684개소)에만 5년 주기 진단의무 부여

② **에너지 진단 →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용자 연계 강화**

- 중소 사업장의 에너지 진단 개선안 이행지원을 위해 에너지절약 시설설치 용자사업('23년 정부안 2,583.3억원) 우선 지원 추진

* 용자사업 기업수요 증가시 사업 운용규모 확대 검토

③ **산업 효율구조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적극지원**

- 대용량(1,000RT급) 산업용 히트펌프 기술개발('23~'27, 약 230억원)
- 보일러·공업로 등 전기화 위한 소재·설계·제어 기술개발('23~'27, 약 195억원)
- 중형급(200kW 이하) 산업용 고효율 전동기 기술개발('23~'26, 약 192억원)

◆ 누적된 **요금인상 요인**을 **단계적으로 반영**하여 **가격기능을 회복**함으로써 **자발적인 수요 효율화 유도**

① (전기요금) 연료비 증가분 반영 및 고강도 비용절감 병행

① 연료비 증가분을 요금에 반영하되, 4/4분기는 물가상황과 서민 생활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,

- 특히, 대용량 사용자(300kW ↑)는 부담능력과 소비효율화 효과를 감안하여 추가 조정
- 물가·민생 여건을 감안하되, 내년부터는 원가 요인을 반영하여 요금 단계적 정상화 추진
- 아울러, 불요불급한 특례·할인제도 정비로 요금제 합리화

* (예시) △대기업의 농사용 요금 적용 배제, △특례요금은 원칙적으로 일몰제 적용

② 이번 요금인상으로 인한 **에너지 취약계층***의 **요금부담 증가**가 **완화** 되도록 **복지할인 확대**(318억원 규모), **뿌리기업** 등에는 에너지 효율화 지원**

* 장애인, 유공자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336만 가구

**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, 에너지 사용 진단 및 효율 개선 컨설팅,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등

② (가스요금) 10월 요금 적정 수준 인상, 未반영분 '23년부터 단계적 반영

① 10월 민수용 요금은 물가 영향을 고려하여 동절기 안정적 천연 가스 수급을 위해 **시급하게 반영 필요한 수준만큼 소폭 인상**

② '23년부터는 그간의 **인상요인**을 **단계적으로 반영**하는 한편, 역대 최대수준인 미수금을 정산단가에 반영하여 점진적 회수

③ 향후 **요금인상 요인 최소화**를 위해 LPG혼소·수요감축 프로그램 등 **가스 수요관리** 지속 추진

◆ 에너지 공급비용 인상요인 최소화와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충,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지속 강화

① 에너지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요인을 최대한 감축

- 에너지 공기업의 자구노력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, 정부도 다양한 비상조치*를 시행하여 요금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

* (예) 필요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탄력 적용, 전력시장 긴급 정산상한가격제도 도입 등

② 에너지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

- ① 에너지 공기업이 최악의 유동성 위기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전·가스공사의 사채발행 한도 상향 추진

* (한전) 자본금+적립금의 2배, (가스공사) 4배 → 최소 5배 이상으로 상향

↳ 한전법 개정안(9.26일 발의), 가스공사법 개정안(9.28일 발의) 연내 처리 추진

- ② 겨울철 천연가스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가스공사 영구채(1조원) 발행 검토

* 영구채는 회계상 자본으로 인식되어 사채발행 규모(자본금+적립금의 4배) 확대 가능

③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지속 강화

- ① 금년 겨울철(~'23.4)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(87.8 → 117.6만 가구) 및 지원단가 인상(12.7 → 18.5만원)

- ② 저소득층·사회복지시설 대상 고효율기기 보급, 단열시공 등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지원단가 단계적 현실화('22. 220만원 → '23. 230만원)

- ③ 저소득층·장애인 등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(351만호) 대상 고효율 가전(1등급) 보급확대 위해 구매금액 환급사업 추진(10%, 30만원 한도)

* '23년 정부안 139.2억원, 정부예산 소진 후에도 한전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대상 확대

Ⅲ. 향후 계획

추진 과제	조치 사항	일 정
1-1-1. 5대 실천강령 이행	전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이행계획 수립	'22.9월
1-1-2. 효율향상 지원 집중	에너지 공기업 겨울철 효율지원계획 수립	'22.10월
1-2-1.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스	주요 소비자·시민단체 중심 서포터스 모집	'22.10월
1-2-2. KEEP 30 협약 체결	30대 다소비기업과 효율혁신 협약 체결	'22.10월
1-2-3. 에너지캐쉬백 전국 확대	참여대상 모집 및 도시가스 부문 도입	'22.11월
1-2-4. 다소비건물 효율혁신 확대	주요 광역시와 효율혁신 협력 MOU 체결	'22.11월~'23년
1-3-1. 국민 주도 뉴미디어 홍보	에너지절약 콘테스트 개최 등	'22.10월~지속
1-3-2. 생활 밀착형 절약 홍보	청구서 활용 절약 메시지 홍보 등	'22.10월~지속
1-3-3. 기존 매체 활용 확대	TV 방송 등 활용 절약 메시지 전달	'22.11월~지속
1-3-4. 미래세대 절약문화 교육	초중고 대상 절약 방법 교육 등	'22.11월~지속
1-3-5. 에너지절약 현장체험	2022 에너지 대전 계기 현장참여 행사 개최	'22.11월
2-1-1.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지원	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으로 세제지원 확대	'23년
2-1-2. 효율향상 기술개발 지원	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으로 세제지원 확대	'23년
2-2-1. 에너지진단 실효성 제고	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등	'23년
2-2-2. 에너지진단-용자 연계	중기 에너지절약 시설설치 용자 우선지원	'23년
2-3-1. 효율향상 핵심기술 확보	3대 효율향상 핵심기술 연구개발 착수	'23년
3-1-1. 전기요금 조정	연료비 증가분 일부 반영, 특례할인제 정비	'22.10월
3-1-2. 취약계층 지원 확대	복지할인 확대 및 뿌리기업 등 효율화 지원	'22.10월~
3-2-1. 10월 가스요금 조정	10월 민수용 요금 조정	'22.10월
3-2-2. 가스 연료비 연동조정	누적된 인상요인 단계적 조정	'23년
3-2-3. 가스 수요 관리	LPG혼소, 수요감축 프로그램 가동	'22.11월~지속
4-1-2. 비용요인 감축	공기업 자구노력, 비상조치 시행	지속
4-2-1. 사채발행한도 확대	한전법, 가스공사법 개정	'22.12월
4-2-2. 가스공사 유동성 확보	가스공사 영구채 발행 검토	'22.11월
4-3-1. 에너지바우처 확대	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, 단가인상	'22.10~'23.4월
4-3-2. 효율개선 지원단가 인상	저소득층 등 효율개선사업 지원단가 현실화	'23년~
4-3-3.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보급	복지할인 가구 대상 고효율가전 구매 환급	'23년

참고2

러-우 사태 이후 주요국 에너지정책 동향

國	전기·가스 요금	효율·절약	원전·석탄·자원수급·기타 등
英	· '21.10월 전기·가스비 상한 £1,277 (196만원) · '22.10월 £2,500 (384만원)로 약2.0배 상승 (2~3인가구 기준) → 2년간 요금 동결, 보조금 지원 등으로 최대 £1,500 (약 230조원) 재정투입 전망 · '21.1월→'22.6월 전기 소매요금 68% 상승 · 저소득층 £650, 연금 수급자 £300 지원 · 쉐 가구 연료비 할인 (£400)	· '35년까지 신규·교체 용 가스보일러 단계적 금지 · 단열재, 히트펌프 설치 지원 (부가세 인하·면제) ·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 ('25년까지 70만 호 주택, '50년까지 모든 주택 개선)	· '50년까지 원전 8기 건설 계획 · 기존 원전 수명연장 검토 · 석탄발전소 3개소 동절기 기간 가동 연장 · 북해 원유·가스전 개발 추진 · 내년 1Q 소비자물가 상승률 18.6% 전망 ('79년 오일쇼크 시 17.8% 이래 최고)
獨	· '21.1월→'22.6월 전기 소매요금 22% 상승 · 에너지기업에 재정지원 법적 근거 마련 · 가스 부가가치세율 인하(19%→7%) · 산업용 가스 역경매제도* 도입 계획 * 공급자가 가격을 부르고, 구매자가 최저가 입찰 방식	· 대중교통 이용 보조금 지원 (총 €40억 규모) · 러시아워 외 시간 신호등 소등 · 공공시설 온수 제공 금지 · 공공건물 난방온도 제한, 출입구, 복도, 로비 등은 난방 금지 · 미관목적 조명 소등	· 연말 폐지 예정인 원전 2기 '23.4월까지 예비전력원으로 유지 (나머지 1기는 폐쇄) · 4.3GW 규모 석탄발전 재가동 승인 · LNG 터미널 건설 추진 · 금년 3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 10% 전망
佛	· '21.1월→'22.6월 전기 소매요금 9% 상승 * 프랑스전력공사(EDF), 전기요금 상한제로 €83.4 손실(약 11.2조원), 정부에 소송 · 전기요금 '22년 말까지 인상률 상한(4%) · 가스요금 '22년 말까지 동결 · '23년 전기·가스요금 인상률 15% 제한 · 휘발유 등 연료비 '22년 말까지 할인 (리터당 15~18센트)	· 개문냉난방 금지 (벌금 €750) · 심야 (01~06시) 전광판 소등 · 루이비통, 매장조명 야간 소등 · 까르푸, 매장조명 30% 어둡게 조절 · 에펠 탑 심야 조명 소등 (23:45 소등) · 공공건물 22시부터 소등	· '35년 원전 6기 건설, '50년 8기 추가 건설 검토 · 생아블드 석탄발전소 재가동 검토 · 美, 알제리 가스 확보 추진 · 佛-獨에 전기·가스 상호 지원 합의
美	· '21.1월→'22.6월 전기 소매요금 22% 상승 · 미국 전역 2천만 가구 전기료 체납, \$160억 규모(약 21조원) · LA, 미납 전기·수도요금에 \$2.75억 지원	· 건물 에너지효율 기준 강화 (최소효율기준 등) · 건물 단열 개선, 히트펌프 설치 세액공제(최대 \$2,000)	· 청정 전력에 원전 포함 · 원전 세액공제 지원 (\$15/MWh, 300억불 규모, 美의회 추정치) · 캘리포니아 州, 원전 수명 연장 · 석유·가스전 개발 지원 · 전략비축유 1.8억배럴 방출 · EIA(에너지정보청), '23년 원유 생산량 1,263만bbl/일(現 1,200만bbl/일) 상향 전망
日	· '21.1월→'22.6월 전기 소매요금 36% 상승	· 냉방 28℃ 제한 · 창문 블라인드 설치 촉구 (3.4% 냉방 절전 효과) · 8월부터 절전 프로그램 참여 가정·기업에 2,000엔 지급	· 원전 7기 재가동 승인 방침 (現 10기 가동 중) · 차세대 원전 개발·건설 · 원전 수명연장 검토 · 천연가스·메탄 등 해저자원 개발 추진
기타	이탈리아 : 공공건물 냉방 25℃, 난방 21℃ 제한, 프로축구 야외 경기장 조명 사용 최대 4시간 제한 노르웨이 : 에너지 부족시 전력 수출 제한 검토, '30년까지 가스 생산량 유지 (122bcm/년, '21년 대비 8% 증가) 스페인 : 노타이 캠페인, 대중교통, 상점, 사무실, 극장 등 냉방 27℃, 난방 18℃ 제한 네덜란드 : 샤워 5분 이내 캠페인, 실내에서 점퍼·양말·슬리퍼 착용 권장 오스트리아 : 연료 배급제 실시, 주택 면적에 따라 전기·가스 사용 한도 설정 핀란드 : 사우나 주 1회, 샤워 5분 이내 캠페인		